

한고비 넘긴 예산안... '이태원 국조' 출발하나

민주 '법인세 1% 인하' 의장 중재안 수용... 여당 수용시 오늘 처리 국힘, 선 예산 합의·후 국조 참여 결정 방침... 거부시 정국 후폭풍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표류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참사 진상을 규명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탓에 국정조사는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11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하면서 '반

쪽 국정조사'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까지 생겼다. 민주당은 15일에도 여당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정조사 참여를 재차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 위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에 성실히 책무를 다해야 할 의무일 뿐"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는 유족과 국민 앞에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위 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 위원과 함께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중으로 국정조

사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일정과 증인 채택 관련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14일)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복귀 시한으로부터 이들이 지난 이날까지도 단독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 엄포를 놓은 대로 야당만으로 특위를 진행한다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도 선 예산안 처리가 이뤄져야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한도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조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고 본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

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앞으로 남은 특위 활동 기간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시작이) 늦어지는 만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정상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16일에는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도 민주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

우, 야권이 제기하는 참사 책임론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압호할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는 여론도 부담이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놓고 있는 국민의힘은 일단 예산안 합의가 이뤄진 이후,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받아들여도 국정조사 참여도 거부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예산안 합의 처리와 함께 국정조사 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힘 재선의원들의 대화 국민의힘 재선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장기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발급절차 개선

민형배, 의료법 등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산) 국회의원이 15일 인 장기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인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 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정절차까지 밟아야 했다. 이는 기증과정 지연, 급기야 기증 중단·이식포기로까지 이어졌고, 그동안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 의료인이 장기기증 대



상자들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민 의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장기구득기관 의무기록 열람·교부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기증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속도가 성패를 가르는 요소인만큼, 절차 간소화로 새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노웅래 체포동의안' 野 "정치 보복" vs 與 "정상 수사"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여야는 15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노 의원에 대한 체포 요구를 검찰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수사'라고 반박하며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과 관련,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야당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검찰의 부당한 청구"라고 강조했다. 조운천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전에는 검찰이 야당을 두드려 때면 여당 한대 패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척이라도 했다"면서 "지금은 죽어라 민주당만 패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결 처리 움직임에 대해 '방탄 시도'라며 반발했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연일 '검은돈' 의혹이 커지는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강기정 시장 "예산안 2000억 삭감 유감"

강기정 광주시장이 증액 없이 2000여억원이나 삭감된 내년 예산안 심의(광주일보 2022년 12월 15일자 1면)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15일 열린 시장 확대간담회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편성 단계에서 예산실에, 심의 단계에서 시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읍소

했던 게 눈에 선하다"며 "심의를 의결이 좋지 못했다"는 점을 느꼈고 여전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시의회에서 '쑥지 예산'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이 더 컸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국비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광주시 예산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2024년 예산은 내

년 초부터 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새롭게 짜나가고, 쑥지 예산·사전 심의 없는 예산 등에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또 내년 1월 정기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외부 부탁이나 들어줘 인사로 인재(人災)로 만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난번 인사에서 (공직자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이번 인사도 공정하게 조직평가 등에 근거해 진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공립박물관 등 설립 시 지자체장 타당성 사전평가

이병훈, 박물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 국회의원은 15일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을 위해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며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음에도 여전히 문제부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



시하고 있어 무늬만 지방이양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문체부가 사전평가를 통해 설립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단지 예산이 쓰여 가는 통로에 불과해 지방에 사업을 이양한 취지가 무색해진다라는 점을 들어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4159 - 9700